

정부예산안에 전북 5조8577억원 반영

요구액 7조42억원에 훨씬 못 미쳐... 새만금 관련 분야, 전년비 630억원 증액... 국회 단계 추가 확보 적극 대응

2017년 정부예산안에 전북도가 건의한 국고예산이 5조8577억원 반영됐다. 이는 당초 7조42억원을 요구한 예산안보다 훨씬 못 미친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도내 현안 사업은 정부 예산안에 5조 8577억원이 반영됐다. 반영된 예산은 계속사업(5조7074억원)과 신규사업(1503억원)이다. 예산이 반영된 사업을 분야별로 보면 ▲

도로·철도 등 SOC ▲새만금 ▲R&D 및 성장동력 ▲농생명 ▲문화관광 ▲환경·안전·복지 ▲지역공약 등이다. 특히 새만금 관련 분야의 경우 전년 정부예산(5971억원)보다 630억원이 증액됐다. 그러나 신규사업인 태광도 명예의전당 건립과 이야기 원천소재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경우 전액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고,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조성 사업과 지

역권 산림치유원 조성 사업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아울러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새만금 수목원 조성, 소리창조 클러스터 조성 등의 예사사업 분야에서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전북도는 과소·미반영 사업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핵심사업을 선정해 국회 단계에서 3500억원 이상이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을 펼친다는 계

획이다. 또 국회의원별 사업(지역구·상임위 사업 분류) 분담 및 책임확보 지원을 협조하고, 시정군수와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국회 상주반을 운영하는 등 예산확보에 노력하기로 했다. 또 관계자는 "최종 국회 단계에서 6조 2000억원대 이상 확보를 목표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뉴스

국민의당 "송희영 찍어내기는 靑, 우병우 건드리면 다친다 경고"

국민의당은 30일 송희영 조선일보 주필의 자진사퇴와 관련 "공포 통치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며 청와대의 언론 길들이기식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양순필 국민의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송 주필 찍어내기가 청와대와 검찰, 여당이 합작해 '우병우 민정수석'을 건들면 다친다는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퍼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송 주필의 문제가 검사 출신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조직적으로 제기됐다는 점에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세세한 의혹은 수사 기관의 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니라면 외부로 드러나기 쉽지 않은 내용들"이라고 지적했다.

양 부대변인은 이어 "얼마 전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일부 언론 등 부패 기득권과 좌파 세력이 우병우 죽이기에 나섰다'며 반격을 예고한 바 있다"며 "김 의원의 언론사 간부 공격은 청와대의 이런 의도가 그대로 실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와 여당은 권력을 이용한 순보기, 검주기로는 결코 우 수석도 대통령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정을 망신장으로 만들고 있는 우병우 사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법은 우 수석이 그 직에서 물러나 민간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이라고 우 수석의 해임·사퇴를 촉구했다. /뉴스

추미애, 사드배치 당내 의견수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사드 배치 당론 결정 여부를 놓고 당내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추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열린 '한반도 사드배치의 주요 이슈와 대응전략 토론회'에서 "어쩌면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대로 된 토론이 이뤄진 적이 없다"며 "국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여론조사를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정학적으로 세력간의 충돌에 의해서 중단됐있는 우리 조국에 또 한 번 지금의 위기가 지정학적 충돌을 불러오지 않을까 하는 외교적 우려를 하고 있다"며 "좁은 한반도 안에서 다시 G2의 충돌을 우리의 마주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외교능력으로 풀 수는 없을 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사드 배치 반대 당론 채택을 미뤘느냐는 질문에 "비우고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며 "사드에 대해서 어떤 토론의 장이 없어서 더민주가 그것을 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도 이날 행사에서 "우리 당이 어떻게 입장을 결정해 나가는 것이 당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좀 더 전문가 말씀을 경청하고 거기에 따라 당의 입장을 하나하나 결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와 새 지도부가 사드 배치 반대 당론을 정하기 위한 사전 정치작업을 하자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반대를 위해 연대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국민의당 대변인은 "다행히도 사드 반대 당론채택을 주장하던 추미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당대표로 취임했다"며 "추 대표에게 성주 사드배치 철회 및 국회 비준 촉구안을 힘을 합쳐 한반도 평화, 그리고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 긴장 완화와 함께 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뉴스



낙동강 녹조현상 확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최인호 부산시당 위원장, 부산과 경남지역 국회의원 등이 30일 오후 부산 사하구 수자원공사 앞 낙동강 하구둑 인근에서 낙동강 녹조 오염실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농민주도형 태양광발전소 확산방안' 토론회

정운천 의원 "농가에 사회안정망으로 기여·다양한 사회적 이익"

국회 정운천(새누리당, 전주) 의원은 30일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농가에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농민주도형 태양광 사업모델(농가발전소) 및 확산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정운천 의원을 비롯해 정우택, 조배숙, 이채익, 김선동, 성일중, 추경호 의원 등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농민 주도형 태양광 사업 모델은 농가소득을 증진하면서 동시에 태양광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모델로 꼽힌다"면서 "농민, 지자체, 금융기관,

태양광회사 등이 협력해 농민들이 태양광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는 사업모델이다"고 설명했다.

장영진 산업자원부 에너지지원정책관은 "정부는 세계경제의 저성장 속에서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통해 온실가스감축,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분산형 에너지공급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농민주도형 태양광 사업모델 확산 등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확대 공급하고, 농민과 태양광 사업자가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운천 의원은 "무엇보다도 하늘을 가장 많이 보는 농가에서 태양을 자원으로 활용해 농가소득으로 이어지는 농가형 태양

광발전소는 정부와 산업계, 그리고 농가에서 모두 활용할 만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태양광 농가발전소가 정부 지원 속에 보급돼 안정적인 농가소득으로 이어진다면 농가에 사회안정망으로 기여할 수 있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측면에서 다양한 사회적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편 독일, 미국, 중국, 브라질 등은 재생 에너지 확대를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 이들 국가의 농민들은 바이오메스 생산이나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농가소득을 확보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신광명 기자

추경처리 진통... 예결위·본회의 무산

여야, 누리과정 예산·개성공단 관련 예비비 문제 접점 찾지 못해

여야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차례로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일부 항목을 둘러싸고 막판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당초 이날 오전 예결위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11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여야간 충돌 속에 예결위는 물론 본회의까지 무산됐다.

예결위 추경안 조정소위는 전날 늦게까지 소관 부처별 추경안 증감을 놓고 심사를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특히 누리과정 예산과 개성공단 관련 예비비 문제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전날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해 지방재무 상황을 위한 예산 6,000억원을 증액하는 안을 단독 처리한

것을 두고 여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 야당은 개성공단 관련 예비비(700억원) 증액 편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구조조정과 무관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은 추경안 처리 진통으로 이날부터 1박2일 일정으로 계획했던 연찬회를 무기한 연기했다. /뉴스

더민주 '추경 타결 대비 비상대기'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본회의 처리가 불발된 가운데 막판 타결 가능성에 대비해 소속 의원 전원 비상대기를 지시했다.

더민주의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기동민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여야는 당초 이날 오전 예결위와 본회의

이완구 전 총리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고(故)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완구(66) 전 국무총리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이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총리는 선거사무소에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취지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모든 증거에 비추면 성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4월4일 이 전 총리와 독대한 자리에서 3000만원이 든 소포백을 건넸음이 인정된다"며 "이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 전 회장의 인터뷰 등 육성 진술과 통화내역, 출입내역 등 객관적 증거, 수행비서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면 유죄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4일 재보궐 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읍에 있는 자신의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성 전 회장 사망 전 인터뷰 녹음파일과 녹취서, 메모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이 전 총리를 유죄로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성 전 회장 운전기사는 차량 뒷좌석에 실었던 (돈이 든) 소포백을 비서에게 건넸고, 그가 소포백을 갖고 선거 사무실에 올라가 이 전 총리와 단말이 남아있는 성 전 회장 손에 직접 전달하고 나왔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이 전 총리가 성 전 회장에게 소포백을 건넬었다는 것이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2일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이 전 총리와 함께 기소된 홍준표(62) 경남도지사에 대한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뉴스

김종희 "삼성 새만금 MOU 백지화, 정부 책임져야"

국민의당 김종희 의원(김제·부안)은 김재수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정부의 삼성 새만금 MOU 백지화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력히 성토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국무총리실이 주관하고 농림부, 지경부까지 참여하여 삼성이 범국가적인 새만금 MOU를 체결한 것은 사실상 국가가 정부투자 이행을 보증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정부는 지금이라도 삼성의 새만금 투자 철회에 대한 책임소재와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새만금 개발을 서둘러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정부 측 서명 당사자인 김재수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내정자 역시 이번 삼성의 새만금투자 철회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후보로서 금번 인사청문회에서 이 점을 강력히 따져 물을 것을 시사했다.

이번 삼성의 새만금투자 철회로 삼성의 새만금 MOU체결은 당시 정부와 여당 내에서 LH본사의 경남 진주로의 일괄 이전설이 흘러나옴으로써 전북도민들의 반발이 거세었던 시점으로 난처한 처지로 내몰린 정부가 사실상 삼성과 합작하여 전북민심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인물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을 삼성 스스로 인정할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정부는 삼성의 새만금 투자계획 발표 보름 뒤 LH공사의 경남 일괄 이전 확정을 전격 발표하였는데 이는 사전에 정부와 삼성 간에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결코 불가능한 사실이라고 했다.

한편, 삼성은 지난 2011년 4월 27일 세종로 중앙정부청사에서 전북도와 오는 2021년부터 204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새만금 개발지역에 총 23조원을 투자하여 5만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약속하고 당시 임체민 국무총리실장, 김순택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재수 농식품부 제1차관, 김경관 지경부 에너지지원실장, 김재수 전북도지사가 투자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김제=박노태 기자

제3지대론... 더민주·국민의당 공방 격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30일 제3지대 정계개편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계에게 주류가 지도부에 당선된 뒤 양당의 공방이 한층 치열해지는 모양새다.

인규백 더민주 신임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윤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한 제3지대 정계개편에 대해 "그게 화학적 결합이 가능하겠나. 이미 국민의당은 제3지대의 정당이 아니라 38세의 의원을 가진 제3당"이라며 "국민의당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안 되고 나는 된다는 식의 정치를 계속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대표도 전날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야권통합을 거론하는 등 더민주의 국민의당을 상대로 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당은 반발했다. 유성열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국민의당에게는 기회가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새누리당이 친박 세력 일색으로 지도부가 구성되고 더민주가 친문 세력 일색으로 구성된 것은 국민의당의 의견을 확장할 수 있는 주요한 여건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도 "호남인들 가슴 속에는 문 전 대표는 이미 버리고 있지 않은가. 가슴 속에서 거의 지워버린 상태"라고 혹평했다.

김영환 사무총장 역시 이날 광화문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에서 "지금 야당이 완벽한 친노 친문일색으로 짜여졌고 2003년 이전의 열린우리당으로 회귀한 듯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그 분들이 야권통합을 주장하고 정권교체를 주장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총장은 "중도개혁주의 노선과 친노패권을 반대하는 분들을 하나로 모으는 플랫폼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당론"이라며 "제3지대는 이제 이미 지난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민의 당 플러스 알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뉴스